

8.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-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.
- ②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는 징계를 받은 자의 용인으로 치유된다.
- ③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.
- ④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.

9.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- ① 「행정절차법」은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.
- ② ‘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’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.
-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구 「도시계획법」상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.

10. 다음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?

()은/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.

- ① 행정처분
- ② 공법상 계약
- ③ 사법상 계약
- ④ 공법상 합동행위

11. 「행정절차법」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.
- ④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·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.

12.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②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이다.
- ④ 구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.

13. 「행정절차법」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- ① 「행정절차법」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.
-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.
-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.

1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- ①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.
-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.
- ③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·재단은 설립 목적을 불문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.
- ④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15.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- 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.
 - ②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다.
 - ③ 구 「건축법」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.
 - ④ 장기미등기자가 등기신청의무의 이행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6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상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 -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 - ③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
 -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17. 「국가배상법」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- ①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된다.
 -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.
 - ③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.
 -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.

18. 「행정심판법」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 -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.
 -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.

19.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- ①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.
 - ②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.
 - ③ 취소소송에는 대세효(제3자효)가 있으나 당사자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.
 - ④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선고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
20.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-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.
 - 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송행위의 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.
 - ③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.
 -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.